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
북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진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가. 의안번호: 1847
- 나. 발 의 자: 이영심 의원(찬성의원 9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10월 2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나. 협조부서: 아동청년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2.11.11.~2022.11.1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안 제2조)

-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하나,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바,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의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임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나
- 같은 법 제16조의3(보호기간 연장)¹⁾에 따라 25세까지 연장가능하며, 추가로 연장 가능하게 됨(‘21.12.31.개정)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법 제3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계획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수립 여부 점검 등은 시행해야 할 것이며, 대신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1)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 지원 사업 (안 제5조)

- 법 제38조(자립지원)2)의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사업과 우리 구에 맞는 내용을 적시
- 제6호의 후견인은 공공후견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친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아 청년을 돌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후견인이 될 사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여 후보자 양성교육을 하고 이들을 후견인 후보로 확보해야 함

○ 예산의 지원 (안 제6조)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올해 8월 대학에 입학한 자립준비청년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말을 남긴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2020년 진행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

2)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립준비청년 2명 중 1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갈등, 심리적 문제 등이 높으며 사회의 편견과 낙인에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연령 도래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 최근 정부는 가정외 ‘보호종료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 왔던 보호종료 ‘아동’을 자립의 주체인 ‘청년’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여겨집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외 보호체계의 보호아동이었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5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거난, 취업난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자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해도,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일반 청년에 비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2020년 신규 보호종료한 인원은 2,368명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에 속하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누적 인원은 12,831명입니다.
 -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비율이 55.4%로 가장 높고
 -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당시 최종 학력은 대학 진학 이상이 52.3%, 고등학교 졸업이 41.0%로 93.3%의 자립준비청년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
 - 가정위탁의 경우 58.3%의 자립준비청년이 대학에 진학한 뒤 보호종료를 하는 것과 달리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보다 14.6%p 적은 43.7%만이 대학에 진학한 후 보호종료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 2020년 현황이 파악된 자립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진학률은 15.5%, 취업률은 50.7%로 66%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진학 또는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 정도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보호종료 1년 차에는 15.3%에서 연차별로 높아지더니 보호종료 5년 차에는 34.5%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채액 또한 보호종료 1년 차에는 571.8만 원에서 보호종료 5년 차에는 769.9만 원으로 198.1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이상정 외, 2020)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가량(47.9%)이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남자(43.4%)에 비해 여자(55.9%)가 12.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보호종료 당사자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적 회복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낙인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정서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 자립준비가 필요한 보호 중 아동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학·취업 지원 및 금융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관련법을 개정(2022.6.22. 시행)하여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보호기간을 기존 만18세에서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

게 되었고 월 30만원이던 자립수당도 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유사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기존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1월 기준 관내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28명이며 이 중 시설퇴소는 7명, 가정위탁은 21명이며, 2023년 보호종료예정아동은 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³⁾를 살펴보면

- “자립준비청년 자립” 관련은 경기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동구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 “퇴소 아동(청소년) 지원”은 서울특별시 등 32개 지자체에서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부산광역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정도와 무관하게 양육시설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성인이라고 하지만

3) 법령정보센터에서 “자립준비, 퇴소, 보호대상”으로 검색

아직 어린 나이로 보호자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많이 부담될 수 있는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관련 조례 현황

[2022. 11. 기준]

계	제정	미제정	비고
26	15	11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1	서울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0.07.16.	
2	종로구			
3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04.02.	
4	용산구			
5	성동구			
6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03.04.	
7	동대문구			
8	중랑구			
9	성북구			
10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11.05.	
11	도봉구			
12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18.01.05.	
1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21.11.11.	
1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2.19.	
15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0.11.12.	
16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05.25.	
17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2.02.16.	
18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11.11.	
19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11.16.	
2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1.03.18.	
2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20.12.24.	
22	관악구			
23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	'21.05.31.	
24	강남구			
25	송파구			
26	강동구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8. 31.(수)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443)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부모’ 심정으로 챙기겠습니다.

- 보호종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고도화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연이은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자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하고, 취임 이후에도 8.15일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를 특별히 추가로 지시하였다.

<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8.29) >

- ◆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
- ◆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된다.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 학업,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였다.
- (보호기간 연장) 지난 6월부터는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개선되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2.6.22일)

-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도 올해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 「고물가 부담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

-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심리·정서 지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력도 추가 확충(120명 → 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 확대하여 총 2,000명을 지원한다.

* 현재 12개 설치, 나머지 5개도 연내 개소 목표로 지자체 협의 중

-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원)가 '23년에 지원된다.

- 관계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①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 구직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

* 신규도약지원프로그램(5개월): **도약준비금**(참여수당 50만원×5개월) + 이수수당 50만원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22년) 1년 최대 960만원 → ('23년) 2년 최대 1,200만원

② (교육부) 자립준비청년 진로·진학 지원

-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career.go.kr)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자립준비청년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에 포함,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경감하였다.

③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22년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443)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구동영	(044-202-7438)
담당 부서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아영	(044-203-6720)
		담당자	사무관	김효라	(044-203-671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이미래	(044-201-4479)